

탈성장(degrowth)의 이론적 기초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위원

탈성장은 1970년대 환경운동에서 출발하여 근본적인 사회개조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는 정치적 어젠다다. 초창기에는 탈성장을 지향하는 개인과 지역공동체의 작은 실천을 강조하는 풀뿌리 생활정치가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반세계화 운동과 결합하며 자본주의체제 극복을 지향하는 탈자본주의 정치 프로젝트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탈성장 운동의 역사적 진화과정에서 그것의 내용과 방향도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된다. 탈성장 담론의 초기 형성기에는 생태의 가치 아래 단일한 운동전선을 형성했으나 점차 정치적 입장의 차이가 부각되어 내부에 다양한 분파들이 난립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지향하는 전통적인 환경운동과 다양한 조류의 급진적 정치운동이 혼재하는 가운데 탈성장을 지향하는 급진적 정치운동은 자본주의체제가 생태 위기의 근원이라고 보는 생태 사회주의자에서부터 근대적 물질문명을 비판하는 반근대/반문명 성향의 극우 정치집단에 이르기까지 이념적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하다. 그로 인해 이념적 정치적 지향에 따라 탈성장 개념의 해석과 이해도 천차만별이다. 성장 만능주의가 인간과 자연생태계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문제의식 이외에는 탈성장론자들 사이에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탈성장은 1970년대 이래 정치사회적 어젠다로 등장한 생태주의가 21세기 버전의 새로운 이름으로 재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탈성장 고유의 이론적 체계 부재

탈성장은 담론 차원의 정치사회적 어젠다로서 고유의 이론과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탈성장 운동의 확산 과정에서 성장만능주의를 반대하는 다양한 사회정치세력이 결합함으로써 탈성장주의의 사상적 이론적 외연도 점차 확장되어 왔다. 탈성장 담론은 단일한 이론체계가 부재한 다양한 학문적 분파들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탈성장 담론의 공통 분모는 “한정된 세상에서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매우 단순하고 간명한 논리에 있다. 지구자원의 한계로 인해 영구적인 성장은 불가능하

며 성장이 계속된다면 인간의 삶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조건을 파괴하여 인간사회도 파멸에 이를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을 뿐이다. 자기완결적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직은 담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탈성장 담론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성장의 기술적 측면-GDP의 지속적 확장-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인간의 생각과 행위,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고방식에 대한 문제제기(Amar에 따르면 성장은 공격성의 표출로 나타난다)를 담고 있다.

2) 생태적 관점에서 성장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시스템에 내재한 '성장 논리'에 대한 사회문화적, 미학적 비판 전면적인 사회개조의 요구로 수렴되어 거시적 미시적 사회변혁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3) 탈성장은 불경기, 경제위기와 연관되는 비관적,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공감에 기초한 조화,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부터의 해방과 진정한 행복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탈성장의 두 가지 흐름: 탈성장(de-growth) vs 포스트성장(post-growth)

탈성장 어젠다 내부의 다양한 입장들은 프랑스의 탈성장 담론과 독일의 포스트성장 담론으로 크게 양분할 수 있다. 탈성장 담론의 전신인 생태주의의 두 가지 갈래, 즉 생태 낭만주의와 생태 합리주의의 전통이 탈성장 담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의 탈성장 담론은 생태 낭만주의, 독일의 탈성장 담론은 생태 합리주의의 전통을 따른다. 성장을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좋은 삶(good life)',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간주하는 것은 다양한 탈성장 담론을 관통하는 공통점에 해당하지만 '좋은 삶'에 대한 해석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 탈성장: 생태 낭만주의의 전통

프랑스의 탈성장 담론은 경제활동의 축소라는 의미의 역성장을 지향한다. 역성장론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기모순적인 언어도단으로 규정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신자유주의적으로 포용한 녹색 자본주의가 역성장주의자들의 이론적 투쟁 대상이다. 그 앞에 어떤 생태친화적인 수식어가 붙든지 간에 발전 또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팽창을 내포하고 있는 한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인간사회와 자연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려면 전 지구적 차원에서 물질적 재료, 에너지, 공간의 소비 총량을 더 이상 늘이지 않고 고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소비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선진국은 역성장, 즉 경제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선진국은 성장이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정언 명령화되어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와 사회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필요를 충족시키는 소박한 수준으로 소비를 줄이고 경제활동을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저개발국가의 경우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

로 올라설 때까지는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고 본다. 역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탈성장주의는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어 급진적 탈성장주의의 본류를 이루고 있다.

역성장 지향의 탈성장 담론은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자기 절제와 소비 감축의 실천을 중시한다. 불황에 따른 경제의 축소가 강제적 탈성장의 비극적 산물이라면 자발적인 탈소비를 통한 경제의 축소는 인간다운, 가치있는 삶과 인간성 복원의 축복을 의미한다.

- **포스트성장 : 생태 합리주의의 전통**

- 독일의 녹색성장론과 녹색당의 보수화

독일의 탈성장(post-growth) 담론은 프랑스의 역성장론과는 다른 발행 경로를 가진다. 1970년대 반핵운동에서 시작된 독일의 환경운동은 합리적 생태주의를 지향해왔다. 성장과의 단절을 생태 위기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역성장론과는 반대로 생태적 근대화론(ecological modernization)을 추구한다. 친환경 기술혁신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한정된 자연자원의 이용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독일의 예외적 현상은 녹색자본주의 구상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것과 관련이 있다. 환경 문제를 사회경제적 문제와 분리하고 환경 문제의 해결은 국가정책에 의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 전통적 환경운동이 녹색당의 주류를 장악하고 정부에 참여함으로써 녹색성장론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 여건이 마련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생태적 관점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 친환경 기술 개발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자원절약-친환경 기술 상용화에 적극적이다. 즉, 녹색전환이 국가적 차원에서 하나의 정치적 기획으로 추진되어왔다. 그 결과 역성장론자들이 전면 부정하는 녹색성장론 기조가 사회 저변에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비근대주의에 기초한 프랑스의 탈성장주의가 전근대와 근대의 하이브리드를 지향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의 탈성장 담론은 인간의 합리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독일의 탈성장 담론은 근대주의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않는다.

- 포스트성장 담론의 등장

독일 주류 사회와 제도권 정치가 지향하는 보수적 성향의 녹색성장론에 대한 자기 반성과 프랑스의 비근대주의적 탈성장 담론의 영향을 받아 포스트성장 담론이 등장한다. 독일의 포스트성장 담론은 비근대주의적 탈성장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니코 페히의 포스트성장 사회론, 사회정의 없이 생태 위기의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회생태주의적 입장의 포스트성장 경제론(성장없는 번영, 비성장경제)가 있다.

비근대주의적 탈성장론이 탈성장을 이상 사회의 목표 또는 규범적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포스트성장사회론은 '성장의 종말'은 피할 수 없는 자연법칙적 현상이자 현실적 추세로 규정한다. 성장의 종말을 성장 강박에 내재한 메커니즘으로 이해하고 포스트성장사회로의 이행을 필연적 과정이라고 본다. 따라서 성장을 인위적

으로 촉진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케인즈주의)을 반대한다. 성장의 종말과 포스트성장 사회로의 이행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포스트성장사회를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개혁을 요구한다.

탈성장의 우파적 버전도 존재한다.

유럽의 극우파 정치세력들은 생태 낭만주의적 탈성장 담론을 문화보수주의적으로 재해석한 반이민, 반이슬람, 반세계화 뉴라이트 운동의 이데올로기로 활용하고 있다.¹⁾

탈성장 담론을 지지하는 신자유주의적 보수우파들도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적 보수우파의 탈성장론도 마찬가지로 성장의 한계로 인한 탈성장 사회로의 이행은 산업사회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주장한다. 성장이 한계에 도달한 원인이 고령화 추세, 공급 과잉으로 인한 시장의 포화상태, 비대해진 복지국가라고 보고 복지국가를 개인의 자발적인 봉사과 기부문화 확립, 여성의 가사노동으로 대체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적 탈성장 담론은 복지국가 해체와 긴축재정, 공공부문의 민영화, 성평등에 역행하는 여성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변질되고 있다.²⁾

극우 보수주의보다는 완화된 버전의 자유주의적 성장비판 담론도 존재한다. 이 입장은 성장 강박의 원인을 성장의존적인 사회적 경제적 제도와 정치정당 때문이라고 본다. 성장정책의 중단, 지속가능성 목표 관리제에 의거한 에너지 및 자원소비의 감축을 주장한다. 소비 의존도를 낮추는 생활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자원소비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생태세 과세와 고용, 교육, 세제, 연금, 의료, 금융시장, 정부재정 등 성장의존적인 사회경제 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다.³⁾

탈성장 담론의 이론적 기초

• 탈성장 담론의 태동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의 한계" 보고서 발표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탈성장 담론이 등장

Andre Amar(프랑스 철학자)

1973년 최초로 성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역성장(Decroissance) 개념을 제안
경제성장의 생태적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주의에 대한 문화적, 윤리적
으로 비판, 경제적 개조를 넘어 사고와 가치관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 -> 비근대주의

Nicholas Georgescu-Roegen(니콜라스 조제스쿠 뢰겐, 생태경제학의 창시자)

탈성장은 성장에 대한 강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

경제의 축소로서 탈성장을 주장

1) Alain de Benoist가 주도하는 프랑스의 뉴라이트(Nouvelle Droite)이 대표적이다.

2) Meinhard Miegler (2010), Exit: Wohlstand ohne Wachstum, Berlin

3) Angelika Zahrt & Irmi Seidl Hrg. (2010), Postwachstumsgesellschaft, Metropolis-Verlag

- 비근대주의: 프랑스 탈성장 담론의 철학적 이념적 기초
계몽주의와 합리적 이성에 대한 비판, 즉 근대성 비판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성장 논리/성장 만능주의는 근대주의의 산물

근대주의의 기초가 되는 인간 vs 자연, 객체 vs 주체의 이분법을 해체

인간과 자연은 분리된 적이 없으며 분리해서 존재할 수도 없다(브뤼노 라투르에 따르면 우리는 한번도 근대인 적이 없다)⁴⁾

생태주의 자연과 인간을 복잡하게 얽힌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전일론적 입장: 인간사회와 자연생태계의 구분을 거부, 전일론적 생태계 개념을 토대로 그것의 일부를 구성하는 인간과 인간사회를 생태적 시각으로 접근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는 에너지와 물질의 흐름으로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유기적 통합체이다 -> 생태경제학의 출발점

- 생태경제학

인간의 창조적 행위로서 경제활동은 자연생태계에서 벌어지는 물질대사 - 생물 요소와 무생물요소(햇빛, 물, 공기 등 생물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주변 환경) 사이에서 교환되는 물질들의 순환 과정-가 문화적으로 확장된 것이다. 경제 성장은 에너지와 물질을 생태계로부터 획득해 사용하고(자원고갈과 환경파괴), 정확히 그만큼의 폐기물을 생태계로 배출하면서(폐기물의 급증과 환경오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활동의 토대인 생태계를 파괴하여 생태 위기를 초래

낭만적 생태주의의 입장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감성적, 미학적, 영적인 (spiritual)인 것으로 인식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자연은 인간다운, 의미 있는 삶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토대

진리는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자연과의 유기적인 교감을 통해 전체적인 연관성과 상호작용 속에서 획득할 수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 물질적 진보, 과학적 합리성과 실용주의에 입각한 삶의 방식과 사회 조직 등 근대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사회를 비인간적으로 변모

탈성장은 근대주의가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인 물질적 진보, 즉 성장을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탈성장이 인간 본성을 회복하여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장

포스트성장 담론의 이론적 기초

- 21세기 버전의 사회생태주의
성장의 한계는 다차원적이며 탈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다.

4) 브뤼노 라투르(1991), <우리는 결코 근대인이었던 적이 없다>.

1) 생태 위기: 녹색성장론의 약속과는 반대로 자원고갈과 생태계 파괴의 부의 외부성은 더욱 심화

2) 사회경제적 불평등 위기 : 빈곤, 실업, 부의 불평등 해소 실패

3) 성과사회/피로사회의 사회적 폐해와 정신질환 증가: 소득이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에 따라 소득의 증가와 행복감 사이 양의 상관관계가 약화된다.

4) 경제성장률의 점진적 저하와 성장의 비효율: 경제가 성숙단계에 도달하면 추세적인 성장률 저하는 불가피하다. 경제성장의 한계비용이 한계효용보다 커짐에 따라 경제성장은 더 이상 경제적이지 않다.

• 비성장경제론(Herman Daly, Tim Jackson)⁵⁾ -> 생태거시경제학

비성장경제(non-growing economy)는 '성장 없는 번영'이 가능하다는 믿음에서 출발

번영(prosperity)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 번영의 사회적, 정서적, 윤리적 기능(identity, affiliation, participation, creativity)을 중시,

19세기 고전파경제학의 정체상태의 경제(steady-state economy) 이론을 생태경제학의 관점에서 재해석

'성장의 종말'을 위기로 바라보는 고전경제학의 비관적 관점을 역전시켜 이상적 상태로 정의⁶⁾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버블과 부채 기반 성장의 불안정성이 '성장의 한계'의 또 다른 요인으로 추가

2013년 장기침체설(Secular Stagnation) 논쟁을 거치면서 고전파경제학자들이 예견한 '성장의 종말'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대두

탈성장 시대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현실 진단과 함께 현재의 저성장체제를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비성장경제론이 확산

비성장경제는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경제를 지향: 실물 자본(physical capital)의 축적과 인구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제

물질과 에너지 사용량을 생태적 한계 내로 유지하고 삶의 질을 개선(의, 식, 주거, 복지, 완전고용, 여가, 공동체, 물리적 환경과 자연자원의 보호와 보전 등)을 경제의 목표를 설정

5) 팀 잭슨(2009), <성장없는 번영>, 전광철 번역, 착한책가게, Tim Jackson(2017), Prosperity without Growth, Foundation for the Economy of Tomorrow, Routledge, London/NY

6) 고전파경제학은 생산요소-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력 체감의 법칙에 따라 무한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는 가설을 주장하며 성장에 대한 비관적 미래를 전망했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 즉 생산성 향상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솔로우 성장이론에 의해 고전파경제학의 성장 한계론은 폐기되었다. 탈성장 담론의 비경제성장론은 경제의 정체상태에서 플라톤적 이상세계를 상상한 존 스튜어트 밀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시몽식 사회주의를 미래의 이상적 사회로 받아들인 밀의 정체상태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자본과 부의 정체상태가 끔찍한 상태라는 고전파학파의 주장에 나는 공감할 수 없다. 그러한 상태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상황일 수 있다. 생존을 위한 적절한 경쟁이 인간의 정상적 상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즉 서로를 짓밟고 압박하고 밀어내고 유린하는 현재의 세대가 인류를 위한 최상의 상태일 뿐, 산업발달 과도기의 부작용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장기침체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기 부진이 금융위기의 충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만성적 수요 부족, 투자 감소와 과소 고용에서 기인하는 구조적 장기침체라는 가설

1930년대 대공황 당시 앨빈 한슨(하버드대학 교수)이 주장한 구조적 장기침체설을 2013년 래리 서머스(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부 장관, 하버드 대학 교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적용하여 구조적 저성장의 시대(뉴노멀)로의 진입을 예견했다. 경제성장의 주요 원천은 신규 투자, 즉 투자의 증가에 따라 총수요와 고용이 증가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한 성숙단계의 경제는 투자 요인이 구조적으로 부족하다. 완전고용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 성장이 정체하고 만성적 실업과 만성적 수요 부진이 발생한다. 그로 인해 오늘날 선진국 경제는 버블의 발생 없이는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없다. 즉 완전고용을 위해서는 버블이 필요하거나 케인즈주의적 투자 사회화와 인위적인 유효 수요 창출이 한시적인 불황 타개책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요구된다.

- 비성장경제의 토대(팀 잭슨)

1) 삶의 질을 개선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기업 활동의 중심을 상품 생산에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 생산으로 전환(상품 생산의 관점에서 음식은 물질적 소비재에 불과하지만 서비스의 관점에서 음식은 영양(몸의 건강한 유지와 몸 기능의 향상)이 중심⁷⁾)

2) 참여로서의 노동 : 일자리 소멸을 이끄는 노동생산성 향상 대신 고용집약적 서비스 부분 확대 -> 일자리 유지

3) 미래에 대한 헌신(commitment)으로서의 투자: 현재와 미래의 생산적 관계를 지향하는 투자, 시민생활의 인프라(학교, 병원, 공공교통시스템, 마을회관, 문화예술 관련 시설, 도서관, 녹지와 공원, 농장 등)와 자원절감 녹색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4) 사회적 재화로서의 화폐: 사회적 가치투자, 부채기반 화폐제도를 대신하는 지역 공동체의 공유은행 설립(캘리포니아 Unified Field Corporation 사례)

탈성장과 포스트성장 담론의 내부 논쟁

- 급진적 생태경제학의 비성장경제 비판

지속적 정체상태의 경제가 생태 위기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 총자본의 저장(stock)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생능력의 한도 내에서 자연자본을 유지해야 한다. 즉 정체상태의 경제보다 훨씬 강도 높은 자연자원 개발 및 소비의 제한이 필요하다.

7) 자동차산업의 경우 서비스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미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가 위주였으나 카셰어링과 라이드 셰어링 등 모빌리티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미래 자동차산업의 무게중심이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 지속적 정체상태의 경제는 한정된 자연자원을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할당 소비하는 것이므로 자원 고갈을 지연시키는 효과에 불과

2) 자원개발의 동학에서 지속적 정체상태는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 자연자원의 분포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자연자원의 품질에도 차이가 있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매장된 좋은 품질의 자연자원이 고갈되고 나면 개발 비용의 상승과 그에 따른 투자수익률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개발 비용 상승으로 한편에서는 자연자원 개발의 투자유인은 감소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연자원의 시장가격을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자연자본과 인공자본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연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인공자본에 비해 상대적인 희소성이 증가하여

총자본에서 자연자본의 상대적 가치가 점차 커지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자원 개발에 점점 더 많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의 정체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3) 정체상태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총자본의 수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재

- 보편적 기본소득권 vs 보편적 자유권

사회정의, 분배정의 실현의 방법론으로 보편적 기본소득과 보편적 자유권 보장의 두 가지 방안이 제시

보편적 자유권은 프랑스 탈성장 운동의 요구: 기본권에 해당하는 교육권, 이동권(mobility), 주거권을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최소한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

리얼 유토피아(Real Utopia)적 실천전략으로서의 탈성장

2002년 유네스코 <발전의 해체, 세계의 재편> 심포지엄은 좌파적 반세계화 운동을 모태로 하는 탈성장 운동의 시발점

- 사회생태주의적 지향과 리얼 유토피아 전략

생태 우선주의(정치적 중립)를 비판하며 생태주의와 급진적 민주주의의 결합을 시도한다.

탈성장은 물질, 에너지, 공간의 소비를 줄이고, 이러한 소비를 자극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줄이는 개인과 사회공동체의 해법이자 사회경제적 불평등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탈성장은 공상이 아닌 현실적 이상과 제도로써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사회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조직하는 리얼 유토피아적 접근을 추구한다.

리얼 유토피아는 사회변혁의 전략으로서 인간의 번영과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사회권력의 강화를 목표로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을 시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성장의 유토피아적 이정표를 따라 현실에서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탈성장의 이상적 사회의 모습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회개혁모델과 제안들을 결집하

여 탈성장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 각각의 영역에서 탈 성장을 실현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탈성장 사회의 이상

성장 강박과 소비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생태 민주주의적 윤리적 공생을 지향하며 경쟁, 이윤 추구, 부의 축적 등 자본주의적 가치와 자연에 대한 약탈적 사고를 대신하여 증여와 나눔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

- 탈성장 사회의 경제

생산과 소비 사이의 생태발자국 최소화를 목표로 자발적인 소비의 포기, 자급자족 로컬 단위의 자급자족적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도심 농장, 협동조합, 지역화폐 도입, 물물교환, 물품과 공간의 공유, 이웃간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개인적, 공동체적 차원의 탈성장 생활방식의 실천 프로그램에서부터 글로벌 분업 시스템으로 조직된 산업생산을 축소하고 자급자족적 로컬경제 구축⁸⁾, 필요에 의한 분배와 기본소득제, 노동시간 단축(주 20시간), 신용버블 방지를 위한 100% 지급준비제도 등 사회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정치전략적 선택

탈성장 목표를 실현하는 정치전략적 방법론은 다음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자기결정권과 자율성에 기초한 상호협력 vs 권위적 테크노크라트에 의한 중앙집권적 통제

개인 및 공동체 차원의 생태저항 vs 국가 주도의 정치기획으로서 녹색전환

여기서 생태저항은 의식의 변혁과 인성의 변화가 궁극적 목표로서 정치적 행위보다는 내적인 가치의 회복, 생태의식의 고양, 생활 방식의 전환을 중시한다.

탈성장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20세기를 지배했던 성장 만능주의의 최후의 표출형태라고 볼 수 있다. 박근혜정부까지 한국의 성장촉진정책은 철저히 공급자 중심이었다.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제도적 자원을 동원하여 투자의 주체인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에 반해 문재인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은 수요자 중심의 성장촉진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경제제도와 복지국가를 통합시킨 유럽식 성장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저복지 한국사회에 부합하도록 변형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이 투자-소득-소비 순환과정의 지속적 확장이라고 할 때 공급주의적 정책이 투자를 성장의 근원으로 보았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소득에 방점을 둔 것이다. 즉 가처분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이면 투자도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성장 정책의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설정하고 일자리 목표치 달성에 국가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부족을 이유로 과

8) 니코 페히 (2013), 성장으로부터의 해방, 고정희 번역, 나무도시

감한 복지혜택 확장에는 소극적인 반면 정부 투자와 지출, 민간투자에 대한 지원을 일자리 창출의 주요수단으로 상정하고 있다. 사회부조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지원이 아니라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의 결과물로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정하고 성장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을 국가가 배분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성장정책과 동일한 성장만능주의의 전형을 보여준다. 양적 확대에 집착하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구조적 저성장의 시대에 역행하는 정치적 실험으로 탈성장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녹색당 정책위원회] '탈성장 세미나' 두 번째

탈성장의 이론적 기초

7월 27일(목) 오후 4시~6시
녹색당 당사(서울 옥인동)

사회. 이승우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발제.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주최. 녹색당 정책위원회

문의. 녹색당 전국사무처 (02-737-1711)

녹색당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

재단법인

바라봄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 본 보고서의 초고는 2017년 7월 19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64회 콜로키움에서 발표되었으며, 2017년 7월 27일 [녹색당 정책위원회 주최의 '탈성장 세미나'](#)의 이론적 기초”의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